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뉴시스

농수산물 등 물가안정 5.6조 투입... 단통법 폐지 재추진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지원 51개 농산물·원료 할당관세 적용 공공요금 관리강화... 인상 최소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2.6%)를 조정하지 않았다. 적극적 재정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의 둔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애둘러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지불보증서)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6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과일류와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품목의 일정 수량에 대해 낮은 세율을 매기게 돼, 수입가격 오름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16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과일 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 1 물가 안정기조 정착
 -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 부과
- 2 시민 핵심 생계비 경감
 - 단통법 폐지 재추진
 -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1.7%) 동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완화
 - 경영상태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근로자 수령 성과급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건설투자 등 내수보장

- 1 건설투자 활성화
 - 공공부문 +15조 투자·용자 확대
 - 중공지연 요인 해소-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000억 연내 소진
 - 유류·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창업허브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고밀 재개발 ->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
- 2 내수 활성화
 - 내수활성화 입법 재추진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 추진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잠재리스크 관리

- 1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통해 PF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 PF사업 자기자본 비율·인센티브 차등화
 - PF통합정보 시스템 구축해 투명성 강화·관리
- 2 가계부채 관리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 초반 수준 관리
 -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9월)

자료: 정부

/뉴시스 그래픽

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 양파 견고추 1만4000톤(t)을 신규로 비축한다. 김 신규 양식장도 개발(2700ha 규모)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30~50%)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

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 계약거래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경우엔 시기 분산·이연 등

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올해부터는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에 기여한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제품 용량 등 주요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공개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예상장 대여 등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고,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하반기 긴급민생안정자금으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이자 등 비용부담 경감에 6800억 원, 임금체불 근로자 대상 임금지급·생활안정자금에 28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친 바 있다. 과일값이 급등했던 올해 2~4월 기간에 비해 다소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이승석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올해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민간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재부의 진단대로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할뿐더러 고금리 기조 속 가계의 이자부담이 민간소비를 제약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도 이번 경제전망에서 "가계 이자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 등을 들어, 소비 제약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휘발유 값은 17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85.6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8일 저점(1648.27원)을 찍은 뒤 15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반도체 등 기술투자 확대... 대기업 일자리 800만개 만든다

AI법 제정 등 18조 규모 금융지원 최상목 "규제 합리화... 혁신 뒷받침"

정부가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향후 10년 내 벤처기업 5만개를 만들고, 대기업 일자리도 80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6위 수준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AI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력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규제로드맵,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양자 기술 R&D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상용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도적 기술 확보 등 전력적 R&D를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인력양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만개 수준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2035년 800만개 이

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업 스케일업 애로 해소를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재정 등 중소기업 정책지원 시스템을 혁신·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점감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컨설팅·금융·수출 등 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승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부처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과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도 시작한다.

기업 부담이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 개선한다. 또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갈등조정체계인 '사회적 갈등 조정기구'를 내년 설치해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도 재추진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며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뉴시스

선진국형 근로시스템 개편

공휴일·급여체계 등 개선

앞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근로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개선된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하고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속성 있게 쉬지 못하는 일도 검토된다. 선진국처럼 한 달에 급여를 2회 지급하는 등 급여체계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금요일에 근무하다 다시 쉬는 등 휴식에 비효율이 발생했다. 1월1일 설 연휴와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윈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